

범죄자 이명박도

사기꾼 정동영도

삼성 장학생이다

삼성비리 척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권영길을 지지하라

2007 세계이주민의날 기념집회

단속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조 표적 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

일시: 12월9일(일), 오후 2시 / 장소: 마로니에 공원(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주최: 이주공동행동, 이주탄압분쇄비대위, 카사마코, 버마행동, 재한중마인연대

삼성에 맞선 투쟁의 의의와 과제

-〈사시시〉장영희기자인터뷰
-삼성SD 하이비트 해고자
최세진 대표 인터뷰

6~7, 16면

검찰의 BBK 범죄 은폐와 혼돈의 정치권

2면



2007 대선과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가치가 사라졌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동지 권영길

4~5면

이주노조 탄압과 저항 고용허가제 3년, 아만의 기록

3면

특집: 기후 변화와 계급 투쟁 크리스 하먼

8~10면



베네수엘라 개헌 국민투표는 왜 실패했는가

12면

우석균 칼럼

-진보정당이 희망이다

11면

런던 국제 반전 회의 참가 보고

10면

〈맞불〉 온라인 기사

오스카 올리베이라 인터뷰
볼리비아의 저명한 반신자유주의 활동
가로 2000년 코차밤바 물 사유화 반대
투쟁을 이끈 올리베라에게 볼리비아 정
치 상황에 대해 듣는다.

민주노동당의
한국노총 사파 논란을 돌아보며
한국노총 지도부가 정책연대를 미끼로
민주노동당에게 사기를 요구하면서 벌
어졌던 일련의 과정을 평가한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이런 것인지 알게 됐을 때는 몸서리가 쳐졌다. 성경을 다시 읽게 됐다. … 이견희 씨네] … 절대로 하느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것 같다.”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민국 신부

“정치프로같이 움직이는 사제들을 보는 것도 역겹다. 다른 사람의 영혼은커녕 진정 자신들의 영혼이나마 돌아보기도 하는 것인지”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비난하는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규재

“[임 화장이] 나에게 송해는 검사를 막기 위한 ‘무리한 주문’을 했다.”

— 대상그룹 회장 임창욱을
경호했던 최승갑

“하루는 새벽 3시쯤 밖에 나가려는데 집 바깥에 히터를 틀고 있는 수상한 차가 있었다. … 시속 2백km로 급가속을 해서 내 차랑을 들어받으려 했다. 목숨을 건 추격전은 40분 가량 계속됐다.”

— 삼성SDI 비자금 관리자였던 강부찬

“이명박은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범죄 전과자이며 각종 부패, 불법, 비리, 부정 의혹의 걸터다니는 백과사전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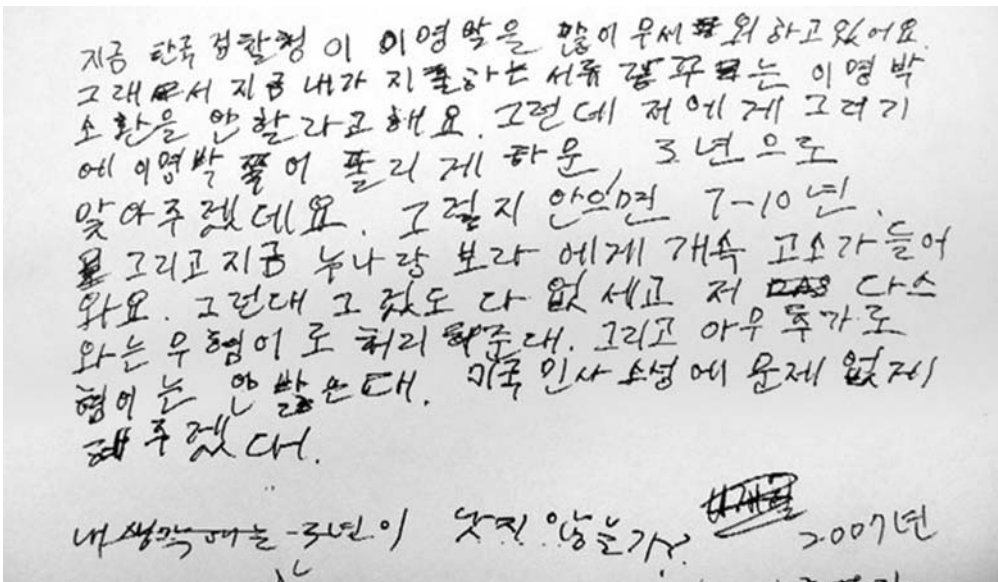
— ‘박사모’의 정확한 비판

“[마사지걸 발언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 40년 전 선배의 조언을 전한 것뿐 … ‘2차’가 뭔지 잘 이해하지 못 하겠다.”

— ‘순진무구’한 이명박

“현장 아우성에 귀 기울이는 게 좋은 대통령”

— 양도세 · 종부세 등
부자 감세를 약속하는 정동영



‘이명박 대변인’을 자처한 검찰의 협박을 폭로한 김경준의 메모

이명박의 범죄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준 검찰

‘떡값’ 검찰총장 임채진과 이명박의 ‘심부름센터’ 검찰이 이명박의 비리를 ‘없던 일’로 만들었다. 검찰은 이명박의 BBK와 다스 실소유, 주가조작 연루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심지어 김경준에게 ‘이명박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 주겠다’며 형량 거래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부패 재벌 · 정치인의 범죄를 밝혀내고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라 은폐하고 면죄부를 주는 기관임이 다시 증명됐다.

이명박은 “숨겨놓은 땅 한 평, BBK 주식 한 주도 없다”고 뻔뻔스런 거짓말을 해 왔지만 BBK 사기극이 다스, 도곡동 차명재산과 한 뿌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BBK 회장 이명박’ 명함과 이명박이 대표이사였던 LKe뱅크가 BBK를 1백 퍼센트 소

유했다는 내용의 하나는행 내부 자료, BBK 창립을 자랑하는 이명박의 과거 인터뷰 등이 명박이 BBK 실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거듭 발견돼 왔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백90억 원이 대부분 이명박의 금융회사로 들어간 자금 흐름도 뚜렷하다.

2라운드

그러나 검찰은 2002년에도 이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명박의 ㅇ도 안 나왔다”는 황당한 결론을 냈다. 이명박의 ‘ㅇ’이 무더기로 쏟아진 지금도 검찰은 이명박을 소환 조사하기는커녕 “거짓말을 밥먹는 것보다 더 많이 한다”(에리카 김)는 이명박의 서면 답변을 고스란히 믿어 줬다.

〈중앙일보〉는 BBK 대주주

홍종국 인터뷰로 ‘삼성 맞춤 후보’ 이명박을 거들었다. 마침 BBK 관련 핵심 증인들은 모두 ‘우연히’ 해외 체류중이며 홍종국도 인터뷰 후 곧 파리 ‘출장’을 가 버렸다.

그러나 검찰이 ‘면죄부’를 발부했다 해서 이명박 ‘시한 폭탄’의 뇌관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 이미 “BBK 전쟁 ‘2라운드’”(〈프레시안〉)가 시작됐다. BBK 의혹에 검찰의 봉합 · 은폐 의혹까지 더해 논란은 더 커졌고 새로운 의혹도 계속 불거질 수 있다. 나아가 극우의 조잡제의 지적처럼 “이명박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최악의 경우 탄핵당할 수 있다.”

이 악취나는 범죄자 이명박의 위장 · 비리 ‘성공시대’는 빨리 끝나야 한다.

남성주

범죄자 · 사기꾼 후보들을 돕는 선거법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이 자유로운 견해 표명을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다.

가장 악질적인 선거법 조항은 93조 1항이다. 이 조항대로 하면, 선거일 1백80일 전부터는 어느 누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추천 · 반대하는 벽보, 사진, 문서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최근 5개월 사이 무려 1천6백명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의 전화를 받았고, 6만 3천19건의 게시물이 삭제 요청을 받았다. 이 게시물의 상당수는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개진이었다.

예컨대 김연수 씨가 만들어 폭발적 인기를 얻은 UCC ‘대통령 이명박 관촬은가’ 시리즈는 이미 알려진 사실들만 편집한 것인데도 선거법 위반으로 삭제됐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최근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와 1만7천 명이 서명할 정도로 화제를 모은 ‘이명박 자녀 위장취업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하라’는 청원 글조차 선거법 위반으로 삭제됐다. 인터넷 기사에 의견성 댓글을 두 줄 남겼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람도 있다.

주류 보수언론들이 대통령 후보들의 범죄와 비리 등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이명박 등은 비판을 피해 아예 TV토론조차 참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들은 유권자들은 입 닫고 표나 찍으란 얘기다.

‘다함께’가 발간한 신문도 지난 지방 선거 때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된 바 있다. 반면, 조중동 등은 아무 제지 없이 공공연하게 보수 후보들을 지지하며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다.

이런 선거법은 돈 많고 흠 많은 기성정당의 후보들에게만 이로울 뿐이다.

얼마 전 대선시민연대와 민연련이 주최하고 선거법 피해자들이 모여 선관위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선거 때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토

론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민 주 권 리 다. 선거 기간에 국가보안법 구실을 하는 선거법은 당장 개정돼야 한다.



최미진

범죄자 · 사기꾼 경연대회가 된 대선

검찰의 BBK 수사 결과 발표 후에도 이명박의 온갖 불법 · 비리 의혹은 잠재워 지지 않을 듯하다.

BBK 수사 결과 발표와 ‘형량 거래 의혹’ 속에 나타나고 있는 혼돈 상황은 정치적 양극화와 정치 위기의 심각함을 보여 준다.

우파의 분열과 이합집산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창사랑’과 ‘박사모’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검찰청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이회창은 ‘범국민 저항 운동’과 촛불집회까지 호소했다.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우익 심대평은 이회창과 후보단일화했다. 심대평이 ‘수구 골통’ 단일화 이후 처음 선보인 것은 식당에서 음담패설을 하며 여기자와

여종업원을 성희롱하는 것이었다. 대선 이후 ‘보수 신당’ 탄생과 한나라당의 분열 · 총선 참패 전망도 나온다.

정몽준은 이명박 지지를 선언했다. ‘현대 재벌가의 재결합’이다. 한편 ‘개혁 사기꾼’들의 붕괴 속에 민주당의 우경화한 기회주의자들은 이명박 · 이회창 캠프로 말을 바꿔 댔다.

프리 허그

범여권은 마지막 몸부림을치고 있다. 문국현은 정동영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결국 자신들도 해체한 열우당의 한 조각이었으며 범여권의 일부임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정동영과

의 입맞춤은 ‘죽음의 키스’가 될 것이다. 단일화는 문국현에게 일부가 있던 개혁 염원 대중마저 등을 돌리게 할 것이다. 문국현은 비정규직이라던 딸들에게 주식 등을 2억 원 어치씩 나눠주고 탈세까지 한 ‘비정규직 해법’ 때문에 이미 추락중이었다. 범여권 후보들의 행태는 지난 시절 ‘개혁 사기꾼’의 것 그대로다.

정동영은 삼성특검에 합의해 놓고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걱정(이견희 처벌)은 필요없다”며 판 소리다. ‘프리 허그’ 운동을 하더니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삭감 등으로 부자들 껴안아 주기 바쁘다. 결국 정동영은 부자 · 재벌들에게 “좋은 ·

착한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논평대로 주류 대선후보들의 ‘이합집산’은 “폐기물 분리수거 과정”과 다를 바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비정규직 확대, 친제국주의, 친재벌, 사회양극화 정책에서 범여권과 한나라당은 사실상 ‘대연정’을 해 왔다.

이에 대한 실망감 · 배신감 때문에 우파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지 “국민이 노망든” 것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어차피 부패한 범죄자 · 사기꾼들 속에서 차악으로 ‘경제라도 살릴’ 이명박을 지지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설사 이명박이 당선한다 해도 그의 입지는 매우 취약할 것이고 부패 의혹은 언제나 그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와 반동적 정책 때문에 그는 노무현보다 더 빨리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한규한

‘인간 사냥’을 중단하고 이주노조 지도부를 석방하라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지난 11월 27일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동시다발 표적 연행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했을 뿐”이라며 한사코 오리발이다. 치밀한 미행·잠복 끝에 연행해 놓고 ‘잡아 와 보니 노조 간부더라’며 판청이다.

〈매일경제〉는 “지금껏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인 이주노조 집행부 간부들을 수차례 적발해 추방했지만 조직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더 강력한 탄압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2003년 강제 추방과 고용허가제 시행에 반대한 3백81일간의 농성,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항의 운동 등 이주노조는 늘 이주노동자 운동의 선두에서 왔다. 정부는 이들이 항의 운동의 구실을 형성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에 대한 탄압이고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운동 건설을 막으려는 것이다.

저항

다행히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는 운동이 매우 신속하게 건설됐고 확대되고 있다.

이주노조는 즉각 2선 지도부를 세워 조직을 정비하고 지도부 3인 석방 투쟁에 돌입했다. 또 순식간에 39개 단체들이 모여 ‘야만적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조 표적 탄압 분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주탄압분쇄비대위)를 구성했다. 민주노총은 탄압 다음날 이석형 위원장이 직접 나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12월 4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도 정부를 규

탄하며 구속된 지도부 석방을 촉구했다. 엠네스티를 포함해 국내외 50개 단체가 신속하게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청주의 국민보호소에 구금된 세 동지들에 대한 면회와 후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주탄압분쇄비대위는 12월 5일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같은날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항의 집회에는 3백여 명이 모여 출입국관리소 앞 집회 사상 가장 큰 규모를 이뤘다. 이 집회

에는 이랜드 노동자 등 한국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했고, 특히 작업장에 이주노동자가 많은 건설노조의 수도권지역본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하는 리플렛을 배포했다.

이렇게 신속하게 항의 운동이 건설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3명의 지도자들 모두 투지와 사기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그리고 연

대 조직들을 향해 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또 이들은 수용소 내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투쟁하고 있다.

3명의 이주노동자 운동 지도자들의 석방을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구속된 이주노조 지도부 석방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freemigrants>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해 단결 투쟁합시다”

까지만 위원장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를 만들어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우리를 한꺼번에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이런 탄압에 맞서 한국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단결해 우리의 권리를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해 단결해서 함께 투쟁합시다!”

라주 부위원장

“우리가 같이 싸우면 희망이 있습니다. 전 위원장 아노아르 동지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끝까지 싸워서 석방됐습니다.

여기엔 난민들도 있습니다.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는 난민 신청도 못하게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친구를 설득해 함께 싸우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마숨 사무국장

“이주노조 수석 부위원장을 포함해 남은 간부들의 블랙리스트를 이곳에서 보았습니다. 이 동지들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는 단속 추방 박살낼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연대 단위들이 더 많은 힘을 실어 주길 바랍니다. 특히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그리고 이주공동행동 모두 더 힘내서 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억압과 야만으로 얼룩진 고용허가제 3년의 기록

‘이주민 1백만 시대’를 맞았지만 이주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건전지’ 취급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주들의 행태는 여전하다.

노무현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권 침해, 송출 비리, 불법체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제도가 실시된 지난 3년 동안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했다.

‘사업장 이동의 원칙적 금지’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돼 버렸다. 폭언과 폭력 등 기업주들의 부당한 처우에도 이주노동자들은 기업주의 허락 없이는 직장을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이주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10퍼센트 하락했고, 노동 시간도 2백73시간에서 2백80.4시간

으로 늘어났다.”(국가인권위원회)

정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노조 가입 자격이 없다”며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해 왔다. 2004년에 명동성당 농성단 공동대표 사망 타파를, 2005년에 초대 이주노조 위원장 아노아르를, 최근에는 이주노조 지도부 3명을 싸늘이 연행해 이주노조의 싹을 잘라버리려 하고 있다. 이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표적 단속·연행도 계속됐다.

실패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2005년에는 16만 명, 2006년에는 8만 명, 2007년 들어서는 4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라 공언했지만, 올해 미등

록 이주노동자는 오히려 22만 명으로 늘어났다. 야만적인 단속추방으로 1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출국시켰는데도 말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올 하반기가 지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고용허가제가 ‘인간사냥’식 단속추방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절름발이 제도라는 점만 분명해지고 있다.

그물총·마취총이 동원된 끔찍한 단속 과정에서 죽거나 다치는 이주노동자들이 속출했다. 올해 2월, 무고한 이주노동자 10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여수 ‘보호소’ 화재 참사는 정부의 단속 추방 정책이 가져온 지옥을 밝히 드러냈다. 국제엠네스티도 ‘2007년 연례보고서’에서 “고용허가제는

차별과 학대의 안전장치로는 실패”했으며, “이주노동자의 무분별한 체포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한 급속노조 삼우정밀노조의 사례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줬다.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김형계 급속노조 대구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그동안 사측은 분열 지배를 통해 한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모두 최저임금에 묶어 둘 수 있었다”며 “한국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싸워야 모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단결과 연대의 경험을 확산시킬 때, 한국 노동자들은 소중한 동지를 얻게 될 것이고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조명훈

민주노동당은 더는 노동계급 정당이 아닌가?

최장집 교수와 일부 당 간부들에 대한 반박

김하영

필자는 최근 <프레시안> 기고 글에서 <한겨레>와 <경향> 등이 민주노동당을 아예 무시해 거의 보도하지 않거나, 간혹 보도할 때는 그 존재의 미미함을 강조하고 정파 갈등의 폐해를 부각시킨다고 지적했다(<프레시안>), ‘민주노동당은 내분이나 일삼는 쓸모 없는 정치 세력인가?’. 특히 “코리아연방공화국” 슬로건을 둘러싼 그런 언론들의 보도는 민주노동당이 NL(민족자주)계열의 정당으로 내분이나 일삼는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민주노동당 측의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며칠 뒤 <경향>은 민주노동당을 1면에 부각시키고 의미 있는 공약을 소개했다.

그런데 이런 류의 보도는 사실 민주노동당 내 일부 우파들과 최장집 교수 등 일부 당 밖 인사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이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말해 민주노동당이 더는 “노동자 정당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 논거는 대체로 민주노동당 지도부 내 NL계열의 확대된 영향력이다. 이것이 바로 <한겨레>와 <경향>의 문제 기사들에서 취재원 구실을 한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장과 김형택 전 대변인의 공통된 개탄이다. 지난해 북핵 사태와 얼마 전 “코리아연방공화국” 논쟁을 거치면서,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서 이런 생각이 강화된 듯하다.

블레어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의) 30 퍼센트가 정파(소속)이고 그 중에서 20 정도가 자주파”라고 말했다. “그럼 (자주파가 그렇게 많은)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은 뭐냐?”는 질문에 조승수 소장은 “민주노동당은 근원적으로 노동자를 대표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했다고 답했다.

“(당을) 깨자”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부에서 (깨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대선) 득표율에 따라” “민주노동당으로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대단히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최장집 교수는 민주노동당으로 안 되며 새 당이 필요하다고 이미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어떤 민주주의인가>의 공저자 박상훈 씨는 최근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민주주의인가> 공저자 세 명(최장집, 박찬표, 박상훈)의 생각은 새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고 밝혔다.

최장집 교수 등의 문제의식은 “주체파



기아자동차 정치실천단 발대식 - 민주노총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여전히 민주노동당으로 표현되고 있다

때문에 민주노동당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진보정당이라면 임금생활자의 생활 문제 같은 것에서 현실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지금의 민주노동당은 추상 수준이 높은 민족통일 문제 같은 데만 신경을 쓴다.”

이런 비판은 얼핏 좌파적인 것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분명하게 의회주의를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요구한다. “사회민주주의적 전망을 가진 정당이 출현하여 사회경제적 이슈를 가지고 기존 정당 체제와 정당들에게 충격을 주기 바란다. ... 민주노동당이 그런 정당[‘유력 정당’]이 되기 위해서 의회주의를 고민해 봐야 한다.” (박상훈)

그래서 민주노동당 내에서 최장집 교수의 주장을 가장 반기는 사람들은 노골적으

로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당내 우파들이다. 최병천 씨(사민넷 기획담당)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최장집 교수의 분석에 동의한다며 이렇게 말한다. “최장집의 이러한 주장을 민주노동당의 현실에 접목한다면, ‘운동에 의한 민주화’를 대체하는 ‘의회주의’ 노선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장집 교수 등의 제안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신자유주의화한 사회민주주의(서유럽에서 잘 쓰이는 용어로 사회적 자유주의)이다. 지난 11월 23일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주최한 대화모임에서 최장집 교수는 민주노동당을 비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노동 중심의 정당은 블레어의 실험과 비슷한 것”이라며 제3의 길을 제시했다. “반시장주의나 반신자유주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그러나 당의 강령과 당원의 사회적 구성 그리고 당의 실천이라는 면에서 볼 때, 민주노동당이 더는 노동계급 정당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 지난 몇 년간 민주노동당 강령의 내용이 후퇴한 것도, 당원의 사회적 구성이 자본가나 중간계급 성원으로 바뀐 것도 아니다. 당의 실천에서도 당은 대체로 노동쟁의를 지지한다.

최장집 교수는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와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표하기보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말로 상징되듯 중산층적인 관심사인 민족통일 문

제, 즉 NL적 이슈를 대표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코리아연방공화국” 슬로건에 대한 비판을 당의 계급적 성격 변화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비약일 뿐 아니라, 마치 “코리아연방공화국” 슬로건과 함께 노동자와 저소득 소외계층의 요구들이 사라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왜곡이다.

박상훈 씨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당이 아니라 “교육받은 중산층 엘리트 정당”이라고 주장한다. “학생운동 출신들이 민주노동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그는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 지도자들의 결의를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건설돼 여전히 민주노총이라는 기반에, 그 인적·물적 자원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다수가 더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최근 민주노총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이번 대선 후보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권영길 후보에 대한 지지가 85.7 퍼센트를 차지했다. 당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았다. 좋은 싫든 민주노총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여전히 민주노동당으로 표현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중산층을 대변”하고 새 정당이 노동계급을 대변할 것이라는 말은 전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조승수 소장은 낮은 조직률을 근거로 “민주노총이 노동자 대표성을 상실”했고 따라서 민주노총에 기반을 둔 민주노동당도 노동자를 대표할 수 없게 됐다는 회

최장집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블레어의 실험은 반전·반신자유주의 여론에 밀린 사임으로 끝이 났다

의론을 편다. 물론 명백한 계급 투표이려면 단지 민주노총을 넘어 노동계급의 다수가 민주노동당에 지지를 제공해야겠지만, 그렇게 되는 데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렇게 되는 데서도 가장 투쟁적이고 잘 조직돼 있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구실이 중요할 것이다.

최장집 교수 등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중요한 사실은 PD가 1980년대 말의 PD와 다르듯이 NL도 1980년대 말의 NL과 같지 않다는 점이다. 옛 소련 붕괴와 김일성 사후 대기근 등 북한의 위기(이른바 “고난의 행군”)를 겪고부터 NL도 의회주의를 대폭 수용했다. 선거를 통한 집권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NL 노선은 전민항쟁”이라고 보는 것은 일면적이다. 물론 의회주의와 함께 대중투쟁도 얘기하는 것이 최장집 교수 등에게는 껴맞추고, “옛날에 (민주화) 운동하듯이 혁명적 전투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늘어놓게 만들고 있지만 말이다.

설사 1980년대식 노선을 고수하는 NL 분파가 있다 해도 스탈린주의 사상과 의회주의는 접목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제3세계 공산당들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 민족해방 민주민주주의 혁명의 1단계에서(는) … 투쟁을 합법적으로 의회 민주주의 틀 안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그래서, 예컨대 1980년대 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스탈린주의자들과 단순한 좌파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유류코뮤니스트들은 ANC 안에서 아무런 무리 없이 한데 섞여 공동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었다.”(최일봉, 《개량인가 변혁인가?》, 다함께 펴냄)

발판

민주노동당이 더는 노동계급 정당이 아니라는 주장이 이번 대선에서 내는 효과는 명백하다. 그것은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는 그럴 듯한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장집 교수는 “보통 사람들의 고통 문제, 고용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후보도 이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민주노동당이 다른 당들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인데, 실전에서

이것은 오른쪽으로 가는 길을 터주고 있다. 가령 전태일의 누나 전순옥 씨는 “민주노동당이 무슨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나”고 분을 토한 뒤 문국현 지지를 표명했다. 전순옥 씨는 “그게 (민주

노동당) 무슨 진보정당이나. 당파들 모여서 싸움하는 곳이지”라며 최근 언론 보도들을 장식해 온 상투적인 민주노동당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문국현을 포함한 자본가 정당 후보들과는 엄연히 다른 공약들을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에겐 내놓고 있다. 모든 후보가 성장을 앞세우는 반면 권영길 후보는 성장보다 서민 소득 증대와 소득 불평등 감소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백대 기업의 이익부담금 등을 통한 연간 3조 원의 정규직 전환기금 마련 등 “유일하게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 공약”(경향)도 내놔다.

‘민주노동당=민족주의’라는 최장집 교수의 프리즘은 이런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게 만든다. 이런 프리즘을 공유해 온 사람들은 “권영길 씨와 민노당은 민족지상주의만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민주의(사회민주주의)를 대표하기도” 한다는 고종석 씨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또,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같은 민주노동당의 간판 공약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성 커플 가족 인정 등도 다른 후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보적 공약이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 당내 좌파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다. 예를 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투쟁 연대’가 아니라 ‘양보 연대’(연대임금제)를 제시한 것 등이 그렇다. 정규직 양보론에 근거한 보건의료노조의 단협 사례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향 평준화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사회의 진보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번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비판을 하더라도 지지하기를 머뭇거리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노동계급 대중정당이고, 반전·반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다. 모든 후보가 다 똑같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매도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설사 그것이 진정한 좌파적 동기에서 비롯한 것일지라도 결과는 기업주들의 정당들을 돕는 꼴이 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동자·민중의 힘을 결집하는 지렛대를 제공할 수는 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으로 모이는 표는 다음 정권 하에서 투쟁의 포문을 여는 발판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의 해법을 제시한 권영길 후보

장호중

얼마 전 〈프레시안〉은 대선 후보들에게 비정규직 해법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친재벌 후보답게 이명박은 기업 “규제를 풀고 세율을 낮[추는] … 기업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했다.

이명박은 또 “경직된 [정규직] 고임금 체계”, “노동법보다 우위에 있는 단체협약” 등을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해 정규직·비정규직을 이간질하려 했다. 산별 협약은 “사용자들[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나마 이 질의서를 받기 전까지 이명박의 정책 공약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언급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무도 진지하게 봐 주지 않는 ‘왼쪽 깜빡이’를 연신 켜대는 정동영은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 김대중·노무현의 ‘배신의 10년’을 감싸는 데 급급하다. 정동영은 비정규직 확대·양산 정부의 계승자다.

‘비정규직 악법 개정’에 반대할 정도로 ‘놈현스러운’ 정동영은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현장 노사갈등을 정치적 주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삼는 노조 지도부”를 성토했고, “정규직 대기업 노조는 … 비정규직 등을 배려”하라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는 ‘비현실적’이라며 반대했다.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명박이 실전만이 아니라 말로도 “배타적으로” 대기업주들을 옹호한다는 사실뿐이다.

무엇보다 정동영의 범여권과 이명박의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악법을 만들고 통과시킨 당사자들이다.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돼야”(정동영)한다며 “점거농성과 같은 불법적 방법”(이명박)을 맹렬히 비난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해 온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한편, 문국현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한다. 비정규직 악법도 ‘사유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국현은 무기한 계약직인 직무급제 등을 비정규직 해법으로 제시하고 정규직이 먼저 비정규직에게 양보하라고 한다. 임시직은 줄여야 하지만 파트타임은 더 늘여야 한다고 하고 “산별노조 법제화는 부당한 개입”이라며 반대한다. 권영길 후보의 ‘노동

하기 좋은 나라’를 비판하며 그가 내세우는 ‘중소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노무현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근본에서 다른지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일관되게 노동자 편에 서서 기업 규제 강화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장해 온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야말로 진정한 노동자들의 대안이다.

권영길 후보는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공공 서비스 확대,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4백만 명 정규직 전환 등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는 비용 부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기업과 부자들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가장 구체적인 대책이고 기업주들의 이익보다 노동자들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친노동자적인 대안이다.

‘노동하기 좋은 나라’

무엇보다 권영길 후보는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과 함께 농성하고 눈물 흘리고 경찰력에 맞섰던, 말과 실천이 일치하는 진정한 노동자 후보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 마땅한 후보다.

다만 권영길 후보가 정규직 노동자 양보론인 ‘연대임금’을 주장하는 것은 안타깝다.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등은 한목소리로 보건의료노조처럼 정규직이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직에 양보하는 ‘술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양보 연대’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몫을 늘릴 수 없고, 비정규직 문제의 진정한 책임을 가리며 정규직·비정규직의 갈등을 더 조장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이 단결해서 단호하게 투쟁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정규직·비정규직이 함께 승리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런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가장 급진적인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해법을 권영길 후보나 민주노동당 9명 국회의원들만의 힘으로 실현할 순 없다. 정부의 신자유주의·비정규직 확산 정책에 맞서 정규직·비정규직이 단결해 투쟁의 연대를 건설하는 게 중요하다.

대선 후보 TV 토론회 일정

1차 : 12월 6일(목) KBS, MBC 오후8시
2차 : 12월 11일(화) KBS, MBC 오후8시
3차 : 12월 16일(일) KBS, MBC 오후8시

부패재벌의 사회 지배에 맞선 저항

전자윤

삼성 ‘독재’의 한국 사회에서 삼성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다. 감히 삼성을 고발·비판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삼성의 무노조 범죄 경영을 고발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3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이견희의 박사 학위 수여를 막아선 고려대 학생들은 출교당해 2년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도 기소 당했다.

그러나 ‘골리앗’을 향해 달려드는 ‘다윗’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김용철 변호사도 그 중 하나다. 김용철 변호사의 고발은 ‘삼성범죄공화국’의 총체적 실체를 드러내 줬다. 마치 마피아 영화를 방불케 하는 삼성의 범죄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견희와 측근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수십조 원에 이르는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임원들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 이 돈들은 삼성 본관 27층 ‘비밀 금고’에서 전달 대상과 액수에 따라 분류된다. 뇌물은 액수에 따라 CD, 월간지, 쇼핑백 등으로 포장된다.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된 돈에 붙어 있던 “이용철(5)”라는 포스트잇을 보면서 뇌물을 대상과 액수에 따라 셀 새 없이 분류 포장하는 ‘뇌물 공장’을 상상할 수 있다.

센 놈들

뇌물은 지인이나 퀵서비스를 통해 정부, 주요기관, 언론 등에 포진한 대상자들에게 전달됐다. 이런 물건을 주로 배달했다는 퀵서비스 회사 직원은 “연말연시에 이런 배달 업무가 집중”됐고 하루에 보통 70여 개를 배달했다고 했다.

이렇게 키워진 ‘삼성장학생’들은 곳곳에서 삼성의 이익을 대변해 유리한 정책을 관철시키고 범죄를 은폐하는 구실을 했

다. ‘최우수 장학생’은 바로 노무현이다. 1999년 ‘삼성자동차살리기운동’에 앞장섰던 노무현은 부산상고 선배이며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이라는 이학수에게 대선 자금을 받았다. 삼성 구조본이 작명해 준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검찰, 금감원, 재경원은 삼성 계열사 노릇을 했다. “참여정부 각료 인사를 삼성 구조본 탐장회의에

이견희의 공손한 하수인, 삼성의 ‘최우수 장학생’ 노무현은 권력을 시장으로 넘기는 데 앞장섰다

서 논의했다.”(김용철) 삼성이 고안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동북아 금융 허브’, ‘한미FTA’ 등은 그대로 채택됐다. ‘참여정부’의 계승자인 정동영은 최근 “총수를 처벌하는 것이 [특검의]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삼성 계열사 정부’의 가장 유력한 계승자는 이명박이다. 이명박 캠프에는 이미 삼성증권 사장 출신 황영기와 삼성 구조본

부사장 출신의 지승람이 가 있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들을 삼성 비자금 관리자로 지목하며 “삼성이 이 후보에게 돈과 사람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의 ‘국민성공시대’ 슬로건도 삼성 작품이다.

결국 ‘글로벌 일류기업’이라는 삼성의 신화는 이 같은 범죄와 비리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었다. 삼성은 뇌물을 고리로 정부와 유착했고 정부는 삼성의 탈세, ❷

삼성 ‘독재’를 어떻게 끝장낼 것인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불러온 거대한 분노의 파도에 밀려 ‘삼성장학생’이 득시글거리는 정치권이 울며 겨자먹듯 삼성 특검법을 발의했다. 노무현도 자기 목을 겨냥한 특검법을 거부하지 못했다. 참여연대·진보연대 등이 주도해서 건설한 ‘삼성 이견희 일가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진상규명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도 이 과정에 기여했다.

특검법 통과 이후 삼성장학생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규재는 삼성 특검법이 “대중의 광기를 등에 업[은]” ‘마녀사냥’이라고 했고 “퐁파리가 뛴는[다]”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비난했다.

이처럼 곳곳에 박혀 있는 삼성장학생들 때문에 삼성 수사와 처벌은 쉽지 않다. 노무현은 국무회의에서 “삼성이 두세 번씩 조사받지 않도록 하라”고 배려했다. 검찰

은 증거 인멸할 시간을 넉넉히 주고 나서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삼성이 간부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 가고 직원들에게 파일 삭제 프로그램을 배포한 후였다. 더구나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고, 삼성증권은 이미 하루 전에 정보를 입수해 압수수색에 대비했다.

삼성의 증거 인멸은 끔찍할 정도다. 김용철 변호사는 “김인주 사장이 나한테 킬러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다”고 했다. 삼성SDI에서 비자금 조성을 맡았던 강부찬은 <시사IN>인터뷰에서 “전화기 4대를 이용하는데 삼성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다. 함께 비자금 업무를 담당했던 선배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 나는 두렵다”고 했다.

노회찬 의원은 “즉각 이견희·이학수·김인주를 소환 조사하고 삼성 본사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검찰은 그럴 기

미도 안 보인다.

따라서 권영길 후보의 주장처럼 “특검으로는 다 안 된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운동을 강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삼성에 맞선 투쟁의 공동전선인 ‘국민운동’은 대중 투쟁 건설에 주력해야 한다. 주요 단체들뿐 아니라 모든 참가 단체들이 중요 논의와 결정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될 필요도 있다. 특히 그릇된 정당 배제 방침 때문에 민주노동당을 배제해선 안 된다. 민주노동당은 이 투쟁에 기여할 능력이 있고 ‘이견희 폭탄 제거반장’을 자임한 권영길 후보도 지지받을 자격이 있다.

폭탄 제거

삼성에 맞선 투쟁의 ‘외부충격’은 삼성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 투쟁을 자극할 것이

다. 삼성노조가 가장 효과적인 내부고발자가 돼 강력한 힘으로 이견희와 지배자들을 뒤흔들길 바란다. 삼성 무노조 신화의 붕괴는 전국 곳곳에서 대대적인 노조 건설 바람을 불러올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 노동자들의 참여와 힘이다. 그 점에서 12월 7일 민주노총의 삼성 본관 앞 집회와 금속노조 울산지부의 삼성SDI 하루 연대 파업은 매우 고무적이다.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들은 삼성과 정부의 범죄 동맹에 맞서는 정치투쟁을 더 강력하고 거대하게 확대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조직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와 가두 행진, 파업 등으로 계급적 힘을 발휘한다면 그 효과는 막대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삼성의 범죄와 비리를 모조리 밝혀내고 이견희와 공범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나아가 재벌개혁·해체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많다. 순환출자를 금지해 재벌의 문어발을 끊어내고 공적기금을 투입해 국민기업화하자는 것이다. 재벌 총수의 황제식 경영과 불법 전횡에 대한 재벌개혁·해체론의 반감은 완전히 옳고 ❷



삼성 노동자들의 무노조 신화 저항을 넘어 조직 노동자들이 삼성에 맞선 정치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불법 세습, 무노조 경영을 눈감아 주면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

삼성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쥐어짠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막아 설 가장 강력한 주체다. 그래서 이견회는 무노조 경영에 악착같이 매달렸다. 노조를 건설하려는 노동자들은 납치, 감금, 폭행, 도청, 핸드폰 위치 추적, 살해 협박까지 당했다.

직원들이 범죄를 고발하거나 노조를 건설할까 봐 감시·통제하는 삼성의 독재적 행태에 대해 전 삼성전자 직원이 “조지 오웰의 《1984년》이 따로 없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 같은 ‘삼성공화국’ 현상은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을 보여 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권력은 선출되지 않는 기업주, 언론사주, 고위 관료, 경찰 수뇌, 판검사, 군장성들에게 있으며 우리가 선출한 정치인들은 기업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다.

특히 신흥공업국인 한국에서 정부와 재벌의 정경유착이 두드러졌다. 소위 ‘민주화’ 이후에는 정경유착 구조에서 재벌의 우위가 더 커졌다. 노무현도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런데 순환출자 금지는 지주회사 전환을 앞당길 것이고, 문어발 경영(업종 다각화) 반대는 업종전문화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순환출자보다 지주회사가, 업종다각화보다 업종전문화가 더 진보적이지는 않다.

지주회사가 된, 업종전문화된 대기업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경영 논리와 구조조정은 계속될 것이다. 공적 기금을 투입해도 주주 이익의 극대화 논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재벌개혁·해체 과정은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불법과 범죄에 이용된 삼성 계열사들(삼성물산,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SDI 등)을 이견회 일가한테서 빼앗아 공기업화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다.

특히 삼성SDI는 노동자 1천 명을 해고하려 한다. 이견회의 비자금과 탈세 자금 등을 이용해 이런 기업들을 국가가 직접 소유·통제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유지하며 공공성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와 정치·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범죄나 일삼는 개인에게 맡겨둘 이유가 없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노동자들이 강력한 계급적 힘을 발휘해 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자본의 집중 속에 재벌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졌다. 삼성은 한국 경제에서 수출의 22퍼센트, 주식 시가 총액의 2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가 말하듯 삼성과 공범인 ‘법조계의 삼성’ 김&장 법률사무소와 ‘회계의 삼성’ 삼일회계법인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놈들”이다. 이들은 정부와 유착해 신자유주의·친제국주의 정책을 주도하고 관철해 왔다.

삼성에 대한 대중의 거대한 반감은 이들의 범죄와 비리뿐 아니라 이들이 주도해 온 정책에 대한 반감이기도 하다. 삼성에 맞선 투쟁은 바로 한미FTA와 양극화 확대에 반대하는 투쟁이며, 노동 탄압과 비정규직 확산 정책에 맞선 투쟁이고, 이라크 파병 등 친제국주의 정책에 맞선 정치 투쟁이다.

더구나 ‘삼성장학생 선발대회’가 되고 있는 대선 국면에서 삼성에 맞선 투쟁은 더욱 중요하다. 삼성 비자금과 범죄의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파와 범여권의 누군가가 어디서든 튀어나올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누가 새로운 삼성의 하위 파트너가 되든 삼성에 맞선 투쟁은 계속해서 ‘태풍의 핵’이 될 것이다.

국 사회와 기존 질서를 뒤흔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은 ‘삼성 범죄공화국’과 한몸으로 얹혀 있는 한국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투쟁에 이바지할 것이다.

삼성 이견회 일가와 최고 경영진의 불법 행위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

일시 : 12월 8일(토) 오후 5시
장소 : 삼성증권 앞(삼성 종로타워)
주최 : 삼성 이견회 일가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진상규명 국민운동

삼성그룹 불법 비자금 규탄 및 이견회 구속, 노동 탄압 중단,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민주노총 2차 결의대회

일시 : 12월 7일(금) 오후 2시
장소 : 삼성본관 앞



〈시사IN〉 장영희 기자 인터뷰

“삼성 비판 보도에 정부 관계자 삭제 압력”

〈시사IN〉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이후 아주 적극적으로 삼성 비판 기사를 싣고 있다. 〈시사IN〉은 삼성 비판 기사를 멋대로 빼버린 사측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던 〈시사저널〉 기자들이 모여 새롭게 창간한 주간지다. 〈시사저널〉 시절부터 삼성을 추적하며 기사를 써 온 〈시사IN〉의 장영희 전문기자를 만나 이번 삼성 사태에 대해 들어봤다.



이른바 〈시사저널〉 사태는 삼성의 언론 지배의 일면을 드러냈는데요,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른바 〈시사저널〉 사태를 야기했던 기사는 이학수 부회장의 인사전횡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가 그 전의 삼성 관련 기사에 비해 강도가 매우 높은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당시에는 의아한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 증언을 보면 몇 가지 이해되는 측면이 있죠. 이학수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2인자로 군림하면서 여러 가지 무리수, 온갖 변칙과 편법 심지어 불법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리기 위해서 언론 보도도 막으려 했던 것이죠.

〈시사저널〉 사태 때 독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삼성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 있구나, 그 반작용이 매우 크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삼성의 치부를 보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삼성 기사를 써 온 기자들은 삼성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기사를 쓰면 예기치 않은 곳에서 ‘그 기사를 꼭 써야 하느냐, 빼달라’ 하는 요청을 많이 받아서 제 주변을 상당히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김용철 관련 기사를 쓸 때도, 삼성과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와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꼭 다뤄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주장이 삼성에서 찾아온 사람과 어휘까지 비슷한 만큼 똑같았어요.

〈시사IN〉은 삼성과 노무현 정부·주요 정치인들의 관계에 주목해 왔는데요?

삼성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국정 의제를 만들어 왔어요. 노무현 당선자가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노무현 정부는 일종의 비주류 세력이어서 삼성이라는 권력화된 경제력이 필요했고, 삼성은 정치 권력이 필요했던 거죠.

삼성이 정책을 만들고 정부가 따라오게 만드는 데 삼성경제연구소가 전위부대 노릇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무원들도 교육하게 됐어요.

삼성이 한국 사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치권이죠. 정치권은 법을 만들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추미애 의원에게 3억 원인지 10억 원인지를 주려고 접근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추미애 의원은 앞서가는 대선주자도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대선주자들은 더 이러저러하게 관리를 받았겠죠.

삼성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하신다면?

‘떡값 검사’ 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은 운신의 폭이 넓지 않죠. 그런 만큼 이 문제를 분명히 수사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많다고 해요.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 말로는 검찰 수뇌부는 수사를 적당히 마무리하려고 한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수사 중단을 사실상 검찰에 명령하기도 했죠.

변협이 ‘적당한 사람’을 추천할 것이고, 대통령이 ‘매우 적당한 사람’을 임명할 것이고, 그렇게 임명된 특별검사가 ‘매우 적당’하게 수사해서 꼬리자르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 모두가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정리 강동훈

기후변화와 계급투쟁

[편집자 주] 12월 3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유엔기후회의가 열렸다. 새로 집권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가 교토협약에 가입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이 모두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합의했지만 조지 부시는 여전히 이 협약을 무력화시킬 공리만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은 이런 미국을 핑계로 빠져나갈 공리를 하고 있다. 교토협약에서 더 나아가, 인류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크리스 하먼**은 개인적 실천이나 정부에 의존해서도, 다른 사회적 쟁점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한다.

주류 정치 논쟁의 주변부에 머물던 기후 변화 문제가 지난 2년 사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거의 매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회의가 열린다. 각계 각층의 정치인과 기업 총수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의지를 밝히고 있다. 심지어 조지 부시조차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정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영국 보수당 총재 데이비드 카메론이 소형 폭력 발전기를 지붕에 설치한(곧바로 제거했다) 것은 순전히 여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세계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지배자들 중 일부는 자본주의가 발 딛고 있는 지구 환경이 한두 세대 안에 해체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없다. 어떤 가스들이 대기 중에 축적돼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것은 잠재적으로 재앙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새로운 날씨 패턴은 식량 작물 수확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폭풍과 가뭄이 빈번해질 것이다. 빙하가 녹을 것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나일강 삼각주와 방글라데시, 플로리다 주 일부지역 등 저지대가 침수 위기에 처할 것이다. 나중에는 런던 중심가와 맨하튼도 물에 잠길 수 있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는 대부분 탄소(석탄)와 탄화수소(석유 제품들)를 태울 때 발생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거의 모두 이 과정에서 얻는다.

가스 축적이 지속될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해 복잡하고 상이한 예측들이 있다. 그러나 전 세계 기온의 예상 상승 범위와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한다. 일부 과학 연구조사들에서 문제를 과소평가했다고 비판받기는 했지만,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가 발표한 예상 수치들과 지난해 10월 영국 정부가 발간한 스텐 리뷰(Stern Review)에 포함된 예측치들이 있다.

스텐 리뷰와 유럽연합은 전 세계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구 기온이 2도 오르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극심한 곤란을 겪을 것이며 그 이상의 기온 상승은 이 지역을 완전히 황폐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으로는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할 수 없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의 농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ppm(1백만분의 1) 단위로 측정해 알 수 있다. 현재 이 수치는 459ppm이다. IPCC는 이 수치가 510ppm에 도달하면 기온이 2도 이상 오를 확률이 33퍼센트가 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590ppm을 넘으면 그 확률이 90퍼센트로 높아진다.

그러나 스텐 리뷰의 배출 감축 목표는

550 ppm이다. 영국 정부의 목표치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총온실가스량을 기준으로) 666ppm이다. 저술가이자 활동가인 조지 몽비오는 배출량이 이 정도 되면 온도가 3도 이상 오를 가능성이 60~95퍼센트가 되는데 그리되면 매우 심각한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독일 로스탁에 모인 G8 정상들은 이 정도 목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이 공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세계 정상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시작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금도 그들이 고려하는 방안이란 고작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배출량의 80퍼센트를 줄여야 하는데도 말이다.

문제의 근원

각국 정부와 기업주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약 한 세기 반 전에 노동계급 거주 슬럼가에서 발생한 장티푸스와 콜레라가 상층 계급 거주지역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질병을 퇴치해야 했던 것처럼 기후변화를 막아야 할 진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지배계급이 직면한 문제는 판돈이 더 크다.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뿐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유지하려는 자본주의 체제의 원동력인 경쟁적 자본축적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환경파괴를 낳았다. 칼 맑스는 《자본론》의 기계에 관한 장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적 농업에서 일어난 모든 발전은 노동자들뿐 아니라 토지를 강탈하는 기술의 진보이기도



하다. 그동안 토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모든 [기술적] 진보는 그러한 비옥함의 근원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처럼, 더 많은 나라들이 현대 산업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시도할수록 이러한 파괴의 과정이 가속된다."

19세기 초 영국 자본가들에게는 전염병보다, 이윤 물이 때문에 노동계급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 더 위협적이었다. 결국 착취할 수 있는 충분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될 수 있었다. 전체 자본가 계급은 노동인구가 쇠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법안과 정부 감시를 지지하는 데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그러나 개별 자본가들은 그러한 조처에 맞서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다. 그들 대부분은 국가가 관리 조치를 도입한 뒤에야 건강한 노동계급이 허약한 노동계급보다 착취하기 더 낫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본주의는 현재 세계 전역으로 진출했고 이제는 일부 지역뿐 아니라 체제가 근거하고 있는 지구 환경 전체를 파괴하고 있다. 한때 노동계급 거주지역에서 기관지염을 일으키는 매연을 내뿜던 공장 굴뚝에서 이제 인류 전체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온실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국제적 문제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내의] 강력한 조치들은 다른 회사나 국가가 [자국] 시장에 침투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발 딛고 있는 기반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후변화를 다른 모든 쟁점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와 기업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강력한 캠페인을 건설하는 데 운동이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순전히 기후변화에만 초점을 맞춘 운동을 건설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런 방식은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 방안을 강제할 조직된 힘을 결집하지 못한다.

단일 쟁점 운동으로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반전운동은 수만 명, 때로는 수십만 명의 시위대를 결집했다. 이런 방식으로 운동은 정부의 인기 없는 정책을 중단시키거나, 때로는 대중에게 이득이 되는 조치를 도입하도록 정부를 강제할 수도 있었다. 지금까지 반전 운동이 미국과 영국 정부보다 이라크 전쟁 수행에서 겪는 어려움을 증폭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그 이상이 필요하다. 자본가들의 굳건한 이해관계를 운동의 요구로 강제할 힘이 필요하다. 세계 석유 자원에 대한 지배권을 지키기 위해 바그다드를 두 번 폭격한 자들이 여론만으로는 쉽게 양보할 리 없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다. 탄소 기반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사는 우리 생활을 포함해 체제 작동 방식의 모든 측면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 점을 깨달은 많은 환경 운동가들은 대중이 자신의 개인적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기후변화 해법이라고 결론짓는다. 물론 우리 모두가 탄소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의 일부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논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개인들이 이기적인 것이 근본 원인이 아니다. 다수 사람들에게는 당장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매일 아침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며 움직이는 첫덩어리에 몸을 싣고 일터에 가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그러나 적절한 [대안적]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한, 노동자

들은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멋진 주택이 존재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주택에 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집을 구입할 수도 없다. 실생활에서 개인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고효율 전구를 사용하거나 쓰지 않는 컴퓨터의 전원을 끄는 것인데, 이것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마른 땅에 침 뱉는 격이다.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면서 개인적 실천을 대안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국가 개입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조지 몽비오의 대체로 훌륭한 책 《열기》(Heat)가 내놓은 답이다. 그는 오직 전 세계 정부들만이 대중의 생활수준을 하락시키지 않고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은 세계 최대 오염 국가들이 그러한 조치를 실행하도록 강제할 주체, 즉 노동계급 대중의 힘을 만들어낼 방법이다. 그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정치 세력을 위해 대체로 훌륭한 정치적 강령을 내놓았다.

통상적인 의회 정치를 통해 그러한 세력을 결집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 역시 개인적 해결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강력한 장애물에 부딪힌다.

결국 많은 환경 운동가들은 현재 체제를 지나치게 흔들지 않는 선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들로 요구 수준을 낮춘다. 교토 의정서가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막지 못하는데도 "최소한 시작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들에게 교토협약에 가입하라는 압력을 가한다. 혹은 아일랜드 녹색당처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없는 정부에 입각하기도 한다.

정부들은 무엇을 하려 하는가?

G8 정상회의는 각국 정부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각기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심지어 가장 확고한 신자유주의자들인 [독일의] 메르켈, [프랑스의] 사르코지, [영국의] 블레어조차 조지 부시가 거부했던 규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것은 일부 자본주의 경제들이 다른 경제들에 비해 탄소에너지 의존도가 약간 낮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보다 탄소 소비가 적은데, 이것은 자체 석유 공급원이 없어서 그동안 석유 소비량을 낮게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대규모 핵에너지 발전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은 제조업 규모가 반으로 줄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었다.

유럽 국가들은 대량 석유 소비국인 미국이나 고도성장중인 중국같은 국제적 경쟁자들이 더 큰 부담을 질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 온실가스 규제 조치를 지지한다. 그럼에도 서유럽 국가들은 기후변화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더 포괄적인 조치의 도입을 꺼리고 있다. 대신 "배출권 거래"나 "탄소 배출 상쇄"처럼 최대 오염국들의 배출량은 유지한 채 다른 지역에서 부분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보통 나무같은 "온실 가스 흡수원"을 심는 것이 가장 선호된다. 그러나 나무가 죽고 부패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다른 많은 경우에서도 그렇듯 시장을 통한 방식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다. 세금

» 10면으로 이어짐



국제 반전 회의 – “전쟁에 반대하는 세계”

내년 3월 이라크 전쟁 5년 규탄 국제 시위를 호소하다

김광일 · 천경록(런던에서)

12월 1일 런던 웨스터민스터 중앙홀에서 열린 “전쟁에 반대하는 세계” 협의회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협의회는 세계 곳곳의 주요 반전 대표단을 런던으로 불러 모았다.

미국 평화정의연합, 이라크 바스라 석유 노조 위원장 하산 주마, 이란 전쟁반대어머니회 마르지 램그라우디, 헤즈볼라 신문 편집장 이브라힘 모우사위, 레바논 공산당 총서기 칼레드 하다다, 이집트 국회의원 하마딘 사바히, 영국 하원의원 조지 갤러웨이, 영국 전쟁저지연합 사무총장 린지 저먼, 영국 급진정당 리스펙트의 사무총장 존 리즈 등이 컨퍼런스에 참가해 연설했다.

이 밖에도 캐나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체코,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대표단이 참가해 약 1천2백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한국에서는 파병반

대국민행동을 대표해 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 천경록 ‘다함께’ 활동가가 참가했다.

개막식에서 영국 전쟁저지연합 사무총장 린지 저먼은 반전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란 공격 가능성은 현실적이다. 부시가 약화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전쟁광들은 지난 5년에서 교훈을 얻지 않았다. 오늘부터 이란 공격에 반대하는 끈질긴 운동을 벌이겠다고 결의해야 한다. 내년 이라크 개전일 규탄 국제시위가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내년 시위에서 이란 공격 반대가 더 중요하게 제기돼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개막식 이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세션들이 있었고, 세계 반전 운동 상황 보고 대회도 있었다. 여기서 파병반대 국민행동을 대표해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 사무처장이 연설했다. 그는 한국의 반전 운



동을 소개하고 노무현 정부의 파병 정책을 폭로하며 국제 연대 강화를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그의 연설에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마지막 정리 회의에서 연사들은 내년 3월 이라크 전쟁 5년을 규탄하는 국제 시위를 벌이자고 호소하며 반전 운동의 전진을 강조했다.

이집트 의원이며 민주주의 운동 활동가인 하마딘 사바히는 “우리가 카이로 반전 회의에 모였던 것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이라크인들의 저항을 지지하는 것도 미 제국주의를 패퇴시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 미국의 제국주의 프로젝트에 맞서 싸우는 세력을 강화해서 이라크에서 미국의 패배를 촉진하고, 미국의 세계적 패배를 앞당겨야 한다. 이를 위해 이집

트에서도 내년 3월 반전 시위를 적극 조직하겠다”며 내년 3월 말 카이로 반전회의에도 참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제 반전 운동은 런던 국제회의의 성공을 디딤돌 삼아 전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일부인 한국 반전 운동도 마찬가지다.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과 아프가니스탄 지역 재건팀 파견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는 것과 동시에, 현실화하고 있는 이란 공격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내년 3월의 개전 5년 규탄 시위는 새 정부 들어서 열리는 사실상 첫 대중 시위가 될 것이므로 한국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 이 글의 축약하지 않은 전문은 <맞불>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9면에서 이어짐

납부를 피하려고 회계 장부를 능하게 조작하는 기업들이 배출량을 조작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개별 정부들은 자신의 특수한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에 들어 맞는 대안을 주장하기도 한다. 부시가 바이오연료에 갑자기 열광하는 것은 미국 농업 자본의 이윤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식량 재배로 평균 수준의 이윤을 창출했던 수백만 에이커의 농지에서 석유를 대체할 대안 에너지를 생산해 엄청난 이윤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제3세계 열대 지역에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지방종재기름을 짜 낼 수 있는 씨앗 — 옥수수, 콩, 유채 씨 등] 식물을 이용해 디젤유를 생산하려 한다.

이것은 이미 현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면, 바이오연료 사용 비율이 석유 사용량의 1퍼센트밖에 안 되는데도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1970년대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기후변화로 날씨 유형이 변화하면서 주요 식량 생산 지역의 작황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곡물과 지방종자의 비축량이 고갈될 수 있다. 그 결과, 식량가격이 상승할 뿐 아니라 수억 명이 기근을 겪게 될 것이다.

계급투쟁

바이오 연료의 예에서 한 가지 중요한 보편적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기후변화는 자본주의 체제의 끊임없는 팽창과

축적의 기반인 지구 환경을 훼손함으로써 체제에 엄청난 균열을 낼 것이다.

기후의 갑작스런 변화는 대중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사회정치적 긴장을 낳는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즈를 폐허로 만들었을 때 미국 사회의 모든 계급적·인종적 모순이 전면에서 드러났다. 다르푸르에서는 가뭄과 제국주의 국가의 개입이 결합돼 오랫동안 평화롭게 공존해 왔던 농업자와 목축업자들이 내전에서 서로 총을 겨누고 있다.

기후학자들은 카트리나 재난과 다르푸르 가뭄과 같은 각각의 이상 기후 사건이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옹계 지적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후변화가 앞으로 이런 사건들을 수없이 만들어 낼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초 멕시코시티에서는 멕시코의 주식인 포르피야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대규모 “포르피야 시위”가 벌어졌다. 포르피야의 재료인 옥수수가 바이오연료 생산에 이용되면서 옥수수 가격이 폭등했다. 멕시코인들을 굶겨서 캘리포니아의 SUV 차량 연료통을 채우는 셈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와 비슷한 시위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계급 간 치열한 대립뿐 아니라 심지어 국가와 국가 사이, 인종 또는 종교 집단들 사이의 갈등이 예상된다.

1천2백 년 전 멕시코 남부에서 번성했던 마야 문명처럼, 환경 재해로 문명이 붕괴한 사례들은 예전에도 있었다. 무리한 경작은 토지의 비옥도를 떨어뜨렸고, 결국 수많은 대중을 굶주림에 빠뜨렸다. 그러나 상층계급은 똑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다. 대중이 기존 생활방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사회를 산산조각 낸 격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졌다.

기후변화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거대한 운동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계급이 서로 다른 반응을 하면서 다양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종종 이 투쟁들의 핵심 쟁점을 찾기 어려워 보일 때도 있다. 자본가와 국가들은 가격과 세금을 올려 빈민들의 생활수준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할 것이다. [런던 시장켄 리빙스턴이 교통혼잡세를 부과한 덕분에 부자들이 [한산한] 런던 중심가를 더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이다.



2005년 12월 기후변화대응 국제공동행동의 날

물가 상승을 되돌리려는 단기적 목적에서 시위와 파업, 봉기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의 근본적 동기가 강력한 계급적 불만임에도, 지배계급의 일부 분파들은 더 많은 배기가스를 배출해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이 운동들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국가와 자본가들이 대중의 생활수준을 낮추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기후변화 해결 방안으로 포장하는 사례를 수없이 보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자비한 자본축적에 있다는 것을 자각한 활동가들은 이 투쟁들에 직면해서 그것의 계급적 동력을 이해해야 한다. 앞으로 벌어질 투쟁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대중의 생활수준을 보호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맞선 가장 확실한 보호 장치는 이윤 축적에 기반한 사회를 필요를 위한 생산에 기반한 사회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자동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자본주의가 몇몇 기후변화 쟁점을 둘러싼 산발적 항의 시위들을 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효과는 자본주의가 발생시킨 모든 투쟁들을 격화시킬 것이다.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기 위해 필요한 세력을 건설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양한 투쟁들에 참여하면서 그들을 자본주의 전체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으로 결집하는 것이다.

번역 이예송

크리스 하먼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중앙위원이자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이다. 국내 번역된 책으로는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쉽게 읽는 마르크스주의>, <패배한 혁명>, <민중의 세계사> 등이 있다.



의사/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가

진보정당만이 한국정치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대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대선에서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하루걸러 1백 명씩 검찰청에 찾아가 BBK의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전부인 듯하다. 도장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계약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지가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판에 ‘정책 선거’가 중요하다는 말은 순진한 발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다. 현 상황을 정치의 실종, 정책 선거 부재라고 진단하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는 듯하다. 심지어 조중동 같은 보수언론들조차 정책 선거의 실종을 말한다. 문제는 그 이유에 대한 진단과 이를 극복할 전망이다.

이회창 씨의 로고송은 “10년을 기다려 온 이회창”이다. 이쯤 되면 코미디를 넘어 비극에 가깝다.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한다. 김근태는 “국민들이 노망이 들었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정말로 국민들의 정치적 무감각과 무지가 문제일까?

이번 대선에서 정치가 사라진 듯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국민의 노망’이 아니다. 그 원인은 바로 노무현 정권 자신, 즉 진보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한 자유주의 세력의 10년 집권이 그 원인이다. 민중에게 ‘진보’나 보수나 자신의 삶이 어려워진 것은 마찬가지인데 정치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정치나 정책은 2007년 오늘 한국에서 민중에게는 말장난으로 보일 뿐이다. 정치의 실종은 진보를 가장했던 자유주의 세력의 정치적 몰락의 결과일 뿐이다.

침소봉대

그런데 이러한 김근태의 절망이 자유주의 세력에 그치지 않고 상당수의 진보적 활동가들에게도 전염돼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요즘은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둘러싼 논쟁이 그렇다. 물론 민주노동당 일부 지도부가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우려 했던 것은 틀렸다. 필자 또한 핵심정책으로서도 또 통일



12월 1일 2차 범국민대회 직후 명동에서 열린 권영길 후보 유세에 모인 지지자들

방안으로서도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민주노동당의 핵심 정책이 아니며 정책의 일부일 뿐이다. 민주노동당과 권영길 후보를 특정 정파의 정당과 후보로 치부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침소봉대일 뿐이다.

진보적 활동가들 중 일부는 ‘코리아연방공화국’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앞세워 민주노동당을 폄하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현재처럼 정치적 공백이 클 때 더욱 문제가 된다.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자유주의 세력의 몰락으로 인한 정치적 공백이다. 이 공백을 기존의 자유주의 세력보다는 진보적으로 보이는 문국현 씨가 일부 메웠고 나머지 부분을 이명박과 이회창이 메우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치 지형이다. 진보정당이 대중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대안정당으로 아직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며 다른 모든 나라들의 진보정당 역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당이 약진하지 못하고 지지율이 낮은 주된 이유를 객관

적인 대중의 역사적 경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로 운동 자체의 한계에서 찾으려 들게 되면 그 결과는, 의도가 어떻든 간에, 대중을 보수정당에게 내모는 꼴이 될 것이다. ‘스스로를 모욕한 후에야 타인을 모욕할 수 있다’는 말은 사회운동에도 해당된다.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은 지금 자신을 모욕할 때가 아니다.

전환점

또 최근에는 비판적 지지론도 진화하고 있는 듯 보인다. 정동영을 비판적으로 지지하자고 하기에는 노무현 정권의 실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판적 지지론이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나고 있다. 진보적으로 보이는 듯한 문국현 후보와의 단일화를 말하기도 하고, 사회운동의 과제가 극우세력 집권 저지와 진보정당 지지 두 가지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코리아연방공화국’ 문제에 대한 과도한 비판도 얼굴을 바꾼 ‘비지론’의 또 다른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치사는 지금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릴 때가 아님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무상의료 정착 과정의 역사를 예로 들어보자.

메이데이의 역사를 말할 때마다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쟁취 투쟁을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1백여 년 전 미국의 노동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전투적인 노동운동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른바 선진국 중에서 무상의료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는 미국 하나다. 그 이유는 미국의 노동운동이 노동자정당을 세우는 것에 실패했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보수정당에 비판적 지지를 보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무상의료의 대명사로 불리는 영국은 2차대전 후 노동당이 단독으로 집권하면서 무상의료가 도입됐다.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등 남부유럽에서 무상의료가 도입된 것도 유럽 최초의 민주화라고 일컬어지는 1970년대 중반 노동자정당 집권 이후다.

이러한 역사적 선택의 결과 미국은 개인파산의 50퍼센트가 의료비 때문인 황당한 나라가 됐고, 유럽은 가장 빈국이라든가 치료비 걱정은 없는 사회가 됐다. 이런 효과는 의료만이 아니라 대선에서 이뤄져야 할 모든 정책들, 즉 비정규직이나 고용, 주택, 교육, 인권 등 모든 문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진보정당의 성장과 집권이 지금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사회적 문제 해결의 유의미한 전환점이라는 것이 모든 나라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다.

현재 대통령선거에서 정치 실종을 극복하고 정책 선거를 복원하는 길은 보수정당과 완전히 절연한 진보정당이 자리를 잡는 것뿐이다.

따라서 지금 진보를 원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할 일은 대통령선거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한미FTA 저지, 반전평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이다.

절망은 보수정당과 보수정치인들의 몫이다. 사회운동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진보정당을 온전히 지지하는 것이다. 지금 절망만이 가득한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만이 희망이고 그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올바른 투자다.

주간 <맛볼>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ire.or.kr / reader@counterfire.or.kr / 전화 : 02-2271-2395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하십시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베네수엘라 개헌 국민투표 부결

우고 차베스는 끝났는가?

마이크 곤살레스가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유를 분석해 보내왔다. 마이크 곤살레스는 영국 글래스고대학교 스페인어문학부 부교수이고, 스코틀랜드의 신생 사회주의 정당 ‘솔리대리티’(Solidarity)의 당원이다. 국내에 번역 출판된 책으로는 《체 게바라와 쿠바 혁명》(책갈피)이 있다.

12월 1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는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우고 차베스가 제안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둘러싼 선거 운동은 그 전날 ‘찬성’ 구호가 적힌 붉은 티셔츠를 입은 차베스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와 함께 공식적으로 끝났다. 11월 30일 카라카스 도심을 가로지른 차베스 지지 시위대는 하루 전의 반정부 시위대보다 훨씬 많았다.

차베스를 지지하는 활동가들은 차베스가 근소하게 승리할 것이라고들 말했다. 그들은 일요일 새벽 3시부터 투표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요일도 이상하게 조용했다. 그 전 몇 주 동안의 활동 수준에 비춰 보면 분명히 그랬다. 몇몇 도시에서는 대학들이 학생 시위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다. 기본 생필품(설탕·밀가루·달걀·우유 등) 부족으로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고조됐다. 대규모 사보타주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야당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카라카스의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건물을 불태우는 등 폭력 사건들도 있었다.

12월 2일 밤이 되자 국민투표에서 차베스가 패배했음이 분명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헌 반대가 50.7퍼센트, 찬성이 49.3퍼센트라고 발표했다. 우고 차베스가 1998년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다. 차베스는 짝막하지만 위엄있는 TV 연설에서 자신의 패배를 신속하게 인정했다.

가장 의미심장한 수치는 기권율이다. 유권자의 45퍼센트가 투표하지 않았다.(2006년 차베스 재선 당시 기권율은 30퍼센트 미만[25퍼센트]이었다.) 우익들은 강렬한 선거운동으로 전보다 더 많이[20만 표] 득표했으므로, 유일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차베스 자신의 지지율이 감소했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 몇 가지는 개헌안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째

1999년 제정된 볼리바르 식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1백30여 개의 조항들은 서로 다른 몇 가지 영역으로 구분됐다. 그러나 처음부터 차베스는 개헌안을 통째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국회에서 수정된 항목들 — 대체로 문구만 다듬은 — 은 또 다른 묶음으로 투표에 부쳐졌다.

개헌안의 많은 조항들은 분명히 진보적이었다. 예컨대, 사회보장제도를 자영업자들에게까지 확대하고, 노동시간을 하루 여섯 시간으로 단축하고, 종교나 성(性)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들을 신설하는 것 등이 그렇다. 또, 개헌안은 2006년에 설립된 주민자치평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2002~2003년 사용자 ‘파

업’ 이후 확립된 무상의료·무상교육 같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미션)들도 더욱 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민중권력”이라는 용어가 헌법에 규정돼 “21세기 사회주의”의 버팀목 구실을 하게 될 터였다.

그러나 다른 많은 조항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군대와 경찰과 국가 경제 부문을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게 하고, 대통령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조항 등이 그렇다. 이것은 사회의 진정한 권력을 기층 조직들에게 넘겨주겠다는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우익들은 “독재” 운운하며 차베스를 비난했지만, 많은 좌파들도 이렇게 차베스의 손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며 이것은 민중권력이나 민주주의 심화라는 미사여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경제 관련 조항들은 경제를 세 부문으로 나누었다. 협동조합과 ‘민중기업’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경제 부문이 약 10퍼센트를 차지하고, 민간부문(사유 재산이 보장되는)이 약 45퍼센트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차베스가 직접 지배하고 점차 중앙집권화하는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적 소유 부문이다. 이것은 결코 글로보비시온(Globovision) 같은 우익 TV 방송이 떠들어댄 “사유 재산의 폐지와 공산주의의 도래”가 아니었다.

결국, 우익은 그들이 가진 무기들을 잘 이용했다. 언론 지배력, 인위적으로 생필

품 부족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독재 반대 구호를 중심으로 사립대학과 전문대 학생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등이 그들의 무기였다.

그리고 우익은 몇몇 중요한 동맹들도 얻었다. 특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차베스 정부의 국방장관으로서] 볼리바르 식 혁명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예비역 장성 바두엘이 우익 진영으로 넘어갔다. 결정적 순간에 바두엘이 차베스를 비난함으로써, 군대 내부의 분열 — 그동안 줄곧 부인돼 왔던 — 이 밝히 드러났다.

사회주의

이번 국민투표 결과가 [운동의] 퇴보라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볼리바르식 프로젝트에서 혜택을 입은 압도 다수의 베네수엘라인들이 이 프로젝트를 거부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이행됐고 앞으로 얼마나 잘 지켜질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많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예컨대, 주택 건축 수량은 약속된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 혁명의 성과로 여겨진 의료 혜택도 이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 같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위한 기금이 마땅히 그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돌아가

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것은 단지 비효율성 때문만은 아니다. 베네수엘라 정치의 고질적 병폐였고 볼리바르식 혁명으로도 뿌리뽑지 못한 대규모 부정부패 때문이다. 그리고 개헌안 부결 선동 와중에 물자 부족 문제가 크게 부각됐지만, 베네수엘라 빈민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물자 부족이 중대한 문제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차베스가 국제 관계에서 점차 급진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좌절과 실망을 보상할 수 없었다. 그들은 민주주의, 진정한 21세기 사회주의라면 진정한 민중권력 건설 — 차베스가 그토록 잘 표현하고 상징하는 가능성, 그러나 그가 약속한 개헌으로는 실현하기 힘들 듯한 가능성 — 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베스를 그토록 열렬하게 지지해 온 베네수엘라인들은 옛 지배계급에게 전혀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옛 지배계급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 1973년 칠레 지배계급이 그랬듯이 끔찍한 보복을 할 것임을 알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사회 기층민들의 외침일 뿐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도 보여 준다. 그것은 특정 개인의 권력 위에 세워진 사회가 아니라 노동대중이 자신의 생활을 집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위에 세워진 사회, 한 마디로 사회주의 사회이다.

12월 3일 개헌 국민투표 부결 소식을 듣고 미라플로레스 광장에 모인 차베스 지지자들

현모양처를 강요하는 사회

정진희

지난 수십 년 동안 여성들의 삶은 크게 변해 왔다. ‘여풍당당’이니 ‘여성시대’니 하는 말은 과장이지만, 오늘날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여성을 어머니와 아내로만 여기는 성별 고정관념도 바뀌고 있다.

그러나 기성 체제는 완고하게 전통적 여성상을 우리에게 강요한다. 지난 11월 초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에 발행할 5만원권 화폐 도안에 들어가는 인물로 신사임당을 선정해 발표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동안 한국은행의 새 화폐 도안 계획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는데, 사상 최초로 여성이 지폐 도안에 들어갈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그 여성은 바로 ‘현모양처’의 대명사인 신사임당이였다.

역사적 인물로서 신사임당이 정말 현모양처였는가 하는 점은 논란거리다. 어떤 여성학자들은 신사임당이 19년간 친정 부모를 모시며 남편을 처가살이시켰다는 점 등을 들며 신사임당을 전형적인 현모양처로 묘사하는 것은 각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970년대에 박정희 정부가 신사임당을 유명한 성리학자 유곡 이이를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로 교과서에 소개하면서부터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의 상징이 됐다. 이것은 한국은행이 신사임당 선정을 통해 “교육과 가정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여성차별 기획

터무니없게도, 한국은행은 신사임당 선정이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의식 제고와 여성의 사회참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여성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내며 반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은 성별 고정관념을 부추기는 “구시대의 여성차별 기획”이다. 한국은행은 신사임당을 이렇게 소개했다.

“남편 이원수를 격려하여 벼슬길로 나아가게 하고 항상 정도를 견도록 내조하는 등 높은 덕과 인격을 쌓은 어진 아내의



여성로서는 최초로 화폐 도안에 들어갈 신사임당 — ‘내조’와 영재교육이 여성의 “소임”?

소임을 다”했고, “사랑과 엄격한 교육으로 네 아들과 세 딸을 모두 훌륭하게 길러냈다. “특히 … 셋째 아들 이이를 조선의 대학자로, 만팔 매창과 넷째 아들 이우를 시·그림에 뛰어난 예술가로 성장시켜 영재교육에 남다른 성과를 보여주었다.”

한국은행뿐 아니라 각종 신문, 잡지, 드라마, 광고 등에서도 늘 어머니와 아내로서 헌신하는 여성상을 예찬한다.

이런 여성상은 여성들의 실제 삶과 맞지 않다. 한국은행의 망상과 달리, 오늘날 대다수 여성들은 집 밖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간다.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은 현재 6백40만 명 가량으로 전체 노동자의 42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 중 다수는 기혼 여성이다.

그럼에도 전통적 여성상에 대한 강조는 여성들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준다. 남편과 자녀의 뒷바라지보다 자아 실현을 우선시하는 여성, 자아 실현을 위해서 ‘심지어’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들은 ‘이

기적’이라고 비난받게 된다.

전통적 여성상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의 노동을 가치절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많은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일하지만 여성의 노동은 가계를 보조하는 것쯤으로 여겨진다. 여성 노동이 ‘부차적’이라는 생각은 여성들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을 정당화한다.

여성 임금이 남성 평균임금의 64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뉴코아·이랜드 투쟁 과정에서 이들 여성들의 임금이 70ㄱ8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놀란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여성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한 달에 채 65만 원도 안 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

여성 가장

가장은 으레 남성이라고 여기는 통념과 달리, 오늘날 여성 가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여성 가구주는 전체 가구주의 20퍼센트를 넘어섰다. 하지만 여성 임금이 이렇게 낮다 보니, 여성이 가장인 가구는 빈곤의 나락에 떨어지기 십상이다. 여성가장 가구의 6분의 1이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전통적 여성상은 육아와 자녀교육 부담을 순전히 개별 가족, 특히 여성들의 책임으로 떠넘긴다. 오늘날 입시 경쟁이 강화하면서 유능한 자녀교육자로서 여성상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영재교육에 남다른 성과”를 보여 주려면, 사실 ‘대치동 입시전문가 엄마’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노동계급 여성들을 더욱 가혹하게 옥죄는 압박이다. 생계비를 벌기 위해 바둥거리는 노동계급 여성들이 어찌 강남의 ‘입시전문가 엄마’를 따라잡을 수 있으랴.

개인들이 짊어지는 양육비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자녀 1명에게 들어가는 총양육비는 지난해 평균 약 2억 3천2백만 원(한국보건연구원)이었다.

값싸고 믿을 만한 보육시설이 부족해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 직장을 포기할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중 일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전업주부’가 된다.

그러나 자식이 커가면서 늘어나는 교육비 때문에 ‘전업주부들’은 쥐꼬리만 한 임금을 받으며 다시 청소부로, 가사도우미로, 텔레마케터로, 보험모집원으로 나선다.

남녀평등을 약속하는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여성차별 관념을 퍼뜨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사와 양육에 들어가는 막대한 부담(돈, 시간, 에너지)을 개별 가정의 여성들에게 떠넘기고,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겪는 차별(임금, 불안정 고용, 승진 누락 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바로 이것이 21세기에도 여전히 현모양처상이 여성들에게 강요되는 까닭이다.

‘현모양처’상은 여성들의 열악한 일자리를 정당화한다

한국 기업의 착취에 맞선 베트남 노동자들의 파업

베트남 동나이의 나이키 하청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만여 명이 며칠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나이키 하청 업체는 한국 기업인 태광이다.

파업 노동자들은 임금·보너스·생활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나이키는 기록적인 이윤을 남겼지만, 하청 업

체 노동자들은 여전히 쥐꼬리만 한 임금을 받고 있다. 이 공장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은 62달러(약 6만 원)인데, 이는 나이키 신발 한 켤레 값도 못 된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노동자 파업이 늘고 있다. 경기 과열과 곡물가 폭등으로 물가 상승이 심해지자 노동자들의 임금은 사실

상 정체했다.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은 물가상승에 맞춰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베트남 정부가 조사한 것을 보면, 외국인 기업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 중 3분의 1만이 현재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베트남에서 파업은 사실상 불법이지만, 파업 건수는 계속 늘어 왔다. 정부 통계로만 지난해 3백80여 건의 파업이 발생했고, 그 중 상당수가 다국적 기업 하청 업체 공장에서 일어났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 기업의 노동조

건은 열악하기로 악명이 높다. 임금 체불, 구타 사례들이 심심찮게 밝혀져 왔다. ‘베트남 신부’에 대한 인종차별적 대우도 베트남 민중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반감을 심어 줬을 것이다. 호치민 시(市) 파업 발생 건수 중 3분의 1이 한국인 소유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안에서 새턴 쪽박이 밖에서도 샌다고, 한국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던 한국 자본가들은 베트남에서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

김용욱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아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되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아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독자편지

letter@counterfire.or.kr

12월 10일(월)까지 독자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운동의 대의를 단호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조민호 동지는 뉴코아·이랜드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11월 7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12월 4일에 열린 첫 공판에는 이랜드 노조원, 민주노동당원, ‘다함께’ 회원 등 40여 명이 방청했는데 재판부 변경으로 재판이 연기됐다. 아래 글은 조민호 동지가 11월 23·24일에 보낸 편지의 축약본이며 전문은 <맞불>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다함께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연행·구속돼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정당하고 값진 뉴코아·이랜드 투쟁과 우리 운동 진영을 방어하기 위해 조사 기간 내내 묵비로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응했습니다.

많은 동지들의 격려가 매우 큰 힘이 됐습니다. 평소에 경험과 조직을 통해 잘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익한 것

인지 새삼 절감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쉽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운동의 대의와 투쟁의 정당성을 단호하게 지켜내고, 함께 투쟁하는 가열찬 투지로 저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장기투쟁을 힘차게 해 나가시는 뉴코아·이랜드, 코스콤, 삼성SDI 하이비트, KTX 여승무원 등 수많은 투쟁의 전사들을 생각하며 저도 이 투쟁의 승리를 향한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전심전

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결정권보다 우선이다

<맞불> 66호 ‘낙태는 왜 합법화돼야 하는가’ 기사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얼마든 간에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삶이 충돌한다면, 당연히 여성의 삶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당연히 여성의 삶이 우선시돼야 하는가?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논증이다.

물론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희생을 모두 감내하는 것은 여성이겠지만 생명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는 태아는 어떤가? 미국의 부시를 비롯한 기독교의 낙태 금지 주장에 여성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맞불> 기사에는 태아의 생명권

이 존재하지 않는 듯 보인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 충돌 문제다. 생명권이 자기운명결정권보다 우월한 가치임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태아를 완전한 생명이라고 여길 수 있느냐가 문제될 뿐이다. 생명에 대한 정의는 현대 의학으로 굉장히 모호하다. 그러나 모호할 경우에는 비록 체외 생존가능성이 얼마 되지 않는 태아라도 생명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낙태는 인류 역사에서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지금은 수위가 정도를 넘고 있다. 낙태권을 인정한다면 산업화와 물질주의로 빚어진 가치관의 부

여성이 자신의 몸과 삶을 통제할 수 있어야

출산은 일과 학업 등 여성들이 계획했던 미래에 종종 단절을 가져 온다. 산전후 휴가가 없는 직장인 태반이고 그나마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여성 노동자 셋 중 한 명은 회사의 압력이나 양육 문제로 퇴사한다. 청소년 등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은 사회적 냉대까지 받는다.

이처럼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게 하는 사회는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가 바뀌더라도 원치 않는 임신 또는 출산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출산에 따르는 육체적 고통도 그대로다.

이렇게 여성의 몸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출산은 당연히 여성이 결정할 몫이다. 몸의 일부인 태아 때문에 여성이 선택을 강요당해선 안 된다.

낙태가 불법인 상황은, 원하지 않는

력의 각으로 감옥생활에 임하겠습니다.

볼러보고 싶은 이름이 참 많지만 마음으로 새기겠습니다. 누구보다 저는 다함께 동지들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에 지금도 열심히 투쟁의 현장에서 분주하게 지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영치금과 책은 잘 전달받았습니다. 참으로 동지들의 따뜻하고 힘찬 격려가 감옥 생활을 이겨내는 데 원동력입니다.

<맞불>을 이곳 감옥에서 보는 느낌이 아주 남다른데. 기사 하나하나 매우 와닿습니다. 범국민행동의날 2차대회가 12월 1일에 잡혔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정말 잘 났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고 현장에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멋지고 힘찬 노동자들과 함께 하루빨리 조우하고 투쟁의 팔뚝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조민호 동지에게 연대의 편지를 보내 주세요
138-600 서울 송파구 송파우체국 사서함 177-13호

재와 인명 경시 풍조만 늘어갈 것이다.

양육 등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여성에게 낙태는 단기적으로 사회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과 동물의 생명이 중요하듯, 인간이 될 예정인 생명도 중요하다.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풍토와, 분위기, 사회 체계를 비판하고 바뀌 나간다면 굳이 낙태가 필요할까?

김도윤



에릭 드루커의 작품 ‘낙태 권리’

낙태를 부추긴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생명 존중이라는 낙태 반대논리는 사후피임조차 방해해 여성들이 더 힘든 낙태 시술을 택하게 하는 모순을 빚고 있다. 성관계 후 50일 안에 복용하면 착상을 막아 주는 사후피임약 RU486은 ‘수정란도 생명’이라는 우익들의 반발 때문에 한국 시판이 불허됐다. 3일 안에 먹으면 수정을 막아주는 약도 의사처방이 있어야 구할 수 있다.

여성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사후피임약과 낙태는 전면 합법화돼야 한다.

승주

뉴코아 · 이랜드 투쟁의 불꽃이 타오른다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 투쟁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은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쟁 끝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랜드 노동자들은 11월 27일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곧바로 KNCC 정의평화위원회,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여신학자협의회 등 18개 기독교 단체가 포함된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준)’(이하 기독교대책위)가 “이랜드 노동자는 한국 교회의 이웃”이라며 지지를 밝혔다.

KO 펀치

기독교대책위는 “박성수 회장은 … 성경에 엄연히 기록된 차별 없는 임금지불과 인간적인 대우를 할 것”을 촉구하며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투쟁이 종교계의 지지까지 얻어낸 것이다. 이랜드 김경욱 위원장은 “[박성수가 다니는] 강남 ‘사랑의교회’에 직접 찾아가 사태 해결을 촉구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명동성당에서 2주째 노숙농성 중인 뉴코아 박양수 위원장은 “[명동성당] 사목회



11월 29일 홈에버 포항점 앞 집회

직원들이 성당 본관 앞까지 경찰을 데려와서 수배자들 잡아가라고” 한 사실을 폭로했다.

올해 매출 순손실이 1천1백61억 원에 이른다는 이랜드 사측은 신규 매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박성수는 신규 매장도 대부분 외주 용역직원(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은 이런 박성수의 구상에 강력한 타격을 주고 있다.

11월 29일 홈에버 포항점 개장식은 서울과 포항에서 모인 7백여 명 노동자들의 타격 투쟁 물결로 뒤덮였다. 개장 첫날이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고 결국 항의 속에 셔터를 내려야 했다. <머니투데이>조차 “비정규직 해고로 노조 파업을 야기한 이랜드 그룹은 불

매운동에 이어 지역 진출 반대에까지 부닥쳤다. … 투자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좌시하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11월 30일에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은 단합 등반대회를 했고 7백여 명이 모여 성대한 단합 뒤편이도 하며 강력한 공동 투쟁을 다짐했다.

이제 뉴코아 · 이랜드 노동자들은 12월 6일 홈에버 신도림점 개장 타격 투쟁 등을 통해 ‘박성수에게 강력한 KO펀치를 먹이겠다’며 이를 갈고 있다. 다시 타오르는 뉴코아 · 이랜드 투쟁에 대한 조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

정종남

‘묻지마’ 통합

그런데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뒤늦게 비정규직에게는 정규직 노조의 단체협약이 아닌 노비계약서나 마찬가지로 지인 개별 근로계약서를 적용하겠다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나와 조합원들은 이런 식의 통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단체협약을 비정규직 조합원에게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비정규직을 차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통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의 강력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차별을 그대로 둔 채 이뤄지는 ‘묻지마’ 통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비정규직 노조는 12월 21일 정규직 노조 임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 집행부와 통합 논의를 계속할 것이다. 나는 민주적 토론과 연대 투쟁을 통해 통합 노조의 깃발이 곧 뜰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박천숙(전국공공연구노조 소비자원 직할 분회장)

광양항 항만 노동자들의 막강한 힘

광양항 항만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다.

수출입 대형 선박을 부두로 이끄는 예선(曳船)지회 노동자들과 컨테이너 운반 장비 기사 허치슨&KIT지회 노동자들, 컨테이너를 결박하고 푸는 동성항운의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한 달 평균 기본급 55만 원, 한 달에 4백 시간이 넘는 최장 노동시간에 시달려온 항만 노동자들은 “더는 이렇게 안 살겠다”며 지난 7월부터 민주노조를 결성했다.

“우리는 잠을 원한다.” “어린 자녀들과 맘껏 놀아 줄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러나 업체들은 “민주노총만 탈퇴하면 요구사항을 들어준다”며 교섭을 회피해 왔다.

화가 난 예선지회 노동자들은 11월 23일 예선선 7척을 이끌고 화물선의 터미널 입출항을 저지했다. 그러자 정부는 해경순찰함 22척을 동원해 위험천만한 진압을 시도했다. 이것은 잡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 됐다.

예선지회 노동자들은 교섭에 진척이 없다면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그러면 “광양만 사상 최대의 물류대란”이라는 저들의 악몽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사측의 양보로 12월 4일 허치슨&KIT 지회 노동자들은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부족함이 있는 합의지만 노동자들은 노조를 인정받는 성과와 자신감을 얻었다.

이제 전국 최초로 예선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광양항 예선지회까지 승리한다면, 제1의 물류 중심지 부산항과 전국 항만에 민주노조 건설 바람이 불 수 있다.

광양항 항만 노동자 1백20명은 파업에 나선 지 5일 만에 민주노동당에도 집단 입당했다. “동북아 물류 중심의 꿈”이 깨질까 봐 잠 못 이루는 지배자들에게 ‘총파업 여수대첩’이 몰아칠 날도 멀지 않았다.

오정숙

누더기가 된 한국노총의 ‘대선 정책연대’

한국노총 이용득 지도부가 추진해 온 ‘대선 정책연대’ 투표가 결국 누더기가 되고 있다.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서 서로 자신이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라며 역겨운 연설을 토해낸 자들이 정략적 본색을 드러냈다. 이회창과 정동영은 한국노총 조합원 투표 시기를 BBK 수사 발표 시점 이후로 미루지 않으면 정책연대 후보에서 빠지겠다고 협박했고, 이명박은 정반대로 “투표일이 5일 이후로 연기되면 정책연대 후보에서 빠지겠다”고 몽니를 부렸다.

결국 한국노총 지도부가 1일부터 투표

를 강행함으로써,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사실상 이명박에 대한 찬반 여부만 답해야 하는 황당한 선택을 강요받는 셈이 됐다.

애초 한국노총 지도부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정책연대 대상에서 제외했을 때부터 ‘대선 정책연대’는 반노동자 후보들 중에서 친노동자 후보를 고르라는 ‘보물 없는 보물찾기’였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지난해부터 노동자들의 대의를 배신하고 비정규직 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 ‘야합’ 등 정부와 기업주 단체들과의 협조에 매달려 왔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가 이러한 한국노총 지도부를 비판한 것

은 전적으로 옳았다.

그러나 한국노총 지도부는 자신들의 배신적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정책연대 포함 여부를 불모로 민주노동당 대표의 사과를 강요했고, 나중에는 민주노동당이 정책연대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것을 이유로 권영길 후보를 정책연대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이회창도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지만 정책연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한국노총 지도부는 노골적으로 반노동자 후보들을 두둔하기에 바빴다.

그러다가 반노동자 후보들이 노동자 이익에는 관심없다는 본색을 드러내고 정책연대 대상에서 빠지자 한국노총 지도부는 닭 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격이 돼 버렸다. 경쟁자들이 빠진 상태에서 아쉬울 것이 없는 이명박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

한 공약 발표를 2주가 넘게 미루는 등 노동자 이익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번 에피소드는 한국노총 지도부가 이전부터 추구해 왔던 기성 정당과의 연대가 파산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런 기만적인 투표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진정한 민심을 대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 이명박 지지를 위한 이용득 지도부의 야합과 꼼수였다는 비판이 타당성을 얻을 것이다.

반면 한국노총 조합원들 사이에서 민주노동당 지지 1만 인 선언운동이 건설되고 있다는 소식은 희망을 보여 준다.

정병호

한국노총에 대한 사파와 ‘정책연대’ 여부를 둘러싼 민주노동당의 대응과 논란에 대한 평가 기사는 <말> 웹사이트를 보시오



삼성SDI 하이비트 해고 노동자 최세진 대표 인터뷰

“행복한 눈물”? 삼성노동자들의 한 맺힌 파눈물

지난 3월 28일 삼성SDI 하이비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해지 했다. 이에 맞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2백 50여 일째 투쟁하고 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가 “삼성SDI 하이비트 조합원들의 눈물을 닦아 주자”며 12월 7일 연대파업을 결정한 상황에서 최세진 동지를 만나 인터뷰했다.

12월 7일 금속노조 울산지부 연대파업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금속노조 울산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삼성SDI 하이비트 해고자들을 위해 파업을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게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이날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삼성을 상대로 최초의 파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노동자 탄압을 악랄하게 하잖아요. 노동자들을 감금해서 사직서를 쓰게 한 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하니까 [개인] 삼성에 맞서 싸우기가 힘들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8명이 뭉쳐서 꾸준히 싸워 연대의 구심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이 정규직을 구조조정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파업을 결의한 데는 비자금 폭로도 도움이 됐습니다. 하이비트 문제는 비자금 문제 등 삼성의 여러 문제 중에 하나임을 알게 됐고, 지금은 삼성노조 건설 문제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투쟁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본관 앞 1인 시위를 하며 분위기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삼성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빨갱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힘내라’며 음료수를 사 주시는 분들도 많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힘이 납니다.

대선에서도 비정규직을 위한 대통령 후보, 삼성에 맞선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인터뷰 · 정리 한규한

삼성하면 ‘일류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삼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하청업체 일을 했지만 하청도 삼성틀 안에 있는 거여서 엄청 대우를 잘해주는 줄 알았어요. 맞고대로 12시간 일하고 1백만 원 남짓 받았는데 그것도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저희는 잔업을 할지 말지 선택할 자유가 없었어요. 잔업이 자유라는 사실을 당시 아무도 몰랐어요.

또 저희가 유리를 많이 만지는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 유리조각들이 혈관에 박혀도 산재처리를 못 받았어요. 다쳐도 쉬지 못하고 봉대 감고 나와서 일해야 했죠. 가끔 불량을 내면 관리자가 벌을 세워요. 커다란 유리판을 들고 구석에 가서 손들고 있게 하기도 했죠.

울산 현대차 하청 노동자가 저희에게 물어봤어요. 연봉 얼마 받고요. 저희는 자랑스럽게 1천3백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하루 8시간 근무에 연봉으로 2천5백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삼성에 다녀서 돈을 많이 받고 대접도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어요. 노조가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번 비자금 사건을 보시면서든 생각이 있다면?

회사는 물량이 없다면서 그동안 묵묵히 일해 온 저희더러 나가라고 했는데, 엄청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분해서 울었어요.

김용철 변호사가 그랬죠. 50억 원 계좌가 1천 개 있다고요. 그 돈이라면 삼성에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더라고요.

비자금으로 홍라희 씨 등이 6백억 원대 미술품을 샀다고 하더군요. 그 중 ‘행복한 눈물’이 1백억 원대라는데 그 그림을 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해고했는가 생각하면, 그건 노동자들의 한 맺힌 파눈물일 거예요. 1천 원이 없어 밥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고 자기들은 좋아할 것 아니니까.



구속노동자들, ‘민주화’ 이후 최대 옥중 단식투쟁

노무현은 퇴임 전에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이광열(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전국의 구속노동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옥중연대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전체 구속노동자 62명(11월 30일 현재) 중 24명이 동참한 이 투쟁은 ‘민주화’ 이후 최대 옥중 투쟁이다. 구속노동자들은 몇 달 전부터 서신으로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옥중투쟁위원회’ 건설을 논의해 왔다.

노무현 정권은 5년 동안 무려 노동자 1천 37명(11월 30일 현재)을 구속했고, 끔찍한 감옥살이를 강요했다. 반면 이견희, 이명박 같은 범죄자들은 건들지도 않았다.

그래서 구속노동자들은 한 번도 법원의 판결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채 곳곳하게 옥중 투쟁을 계속해 왔다.

11월 19일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포항건설노조 김봉태 동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민주노동당 박종기 동지가 옥중 투쟁의 포문을 열었고 11월 26일에는 전해투 변외성 전 집행위원장이 ‘옥중투쟁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언문’을 발표하고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그리고 12월 3일에는 구속노동자 20명이 일제히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지경 위원장을 비롯해 2006년 포항건설노조 투쟁으로 구속된 노동자들, 장승표 부위원장을 비롯해 올해 7월 타워크레인 파업으로 구속된 노동자들과 한미FTA 반대 집회로 구속된 동지들

이 함께하고 있다. 또, 뉴코아·이랜드 투쟁에 연대하다 구속된 ‘다함께’ 회원 안병문·조민호 동지, 민주노동당 은평지역위 이군봉 동지도 함께했다. 노사관계로드맵에 야합한 한국노총에 항의하다 구속된 전해투 강성철 전 집행위원장도 함께하고 있다.

구속노동자후원회를 비롯해 11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은 12월 3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옥중 단식투쟁을 지지하며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표단은 청와대에 양심수 석방을 바라는 시민 1만 명의 서명을 제출하고 1인 시위를 했다.

노무현은 구속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양



12월 3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심수들을 석방하고 청와대를 떠나라. 그것만이 ‘개혁 사기극’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역사적 범죄를 다스려야 속죄하는 길이 될 것이다.